

# 조세 재정

2017. 8. 31(통권 제55호)

# BRIEF

##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김문정 재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044-414-2342)



**BRIEF**

---

##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김문정 재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044-414-2342)

---

I. 들어가며 .....	02
II. 트럼프 정부 예산안의 주요내용 .....	02
III. 오바마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 .....	05
IV. 검토 및 결론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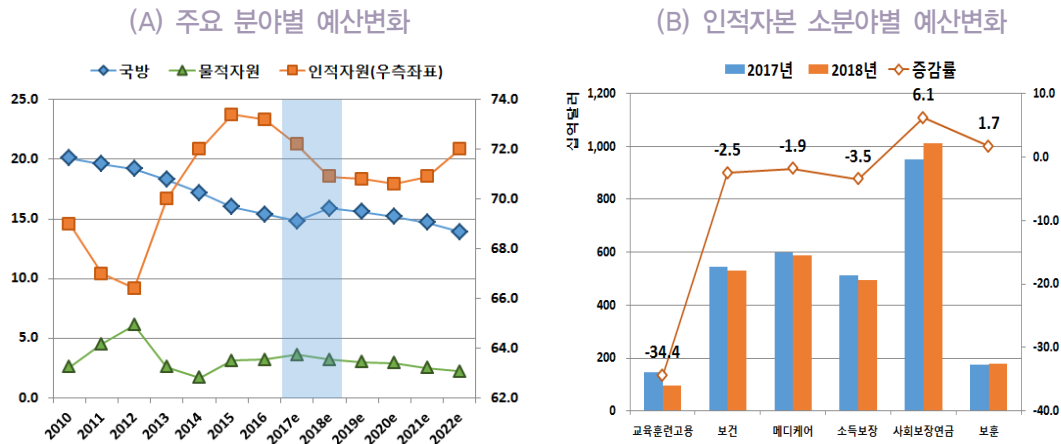
## I 들어가며

-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지출의 중점을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국 우선주의란 경제적·물리적 보호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그 외 집단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 본고에서는 미국의 조세·재정 정책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오바마 前행정부의 FY2017 예산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함
- ●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이라는 복합적인 국정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기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前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II 트럼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방비 예산을 증대할 것을 요청
  - 총재정지출에서 국방비 비중은 2010년~2017년까지 평균 2.9%씩 매년 감소해왔음.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적용하면, FY2018 국방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7.4%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셈임([그림 1-A]에서 빗금친 영역 참조)
- ● 국방비 증대를 위한 지금은 비국방비 분야 예산삭감을 통해 충당할 것을 제안
  - 총재정지출 중 인적자본(human resources)의 FY2018 재정비중은 (FY2017 대비) 72.2%에서 70.9%로 감소, 물적자본(physical resources) 재정비중은 3.6%에서 3.2%로 감소
    - 인적자본 분야의 교육·훈련·고용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 감축하고([그림 1-B] 참조), 물적자본 분야의 에너지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 감축할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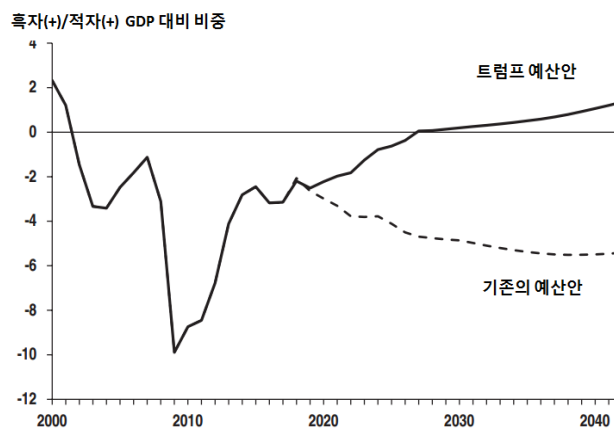
[그림 1]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 국방비 vs 비국방비



자료: OMB(2017d), Table 3.1 Outlays by superfunction and function: 1940-2022

- 국방비를 늘리는 만큼 비국방비를 줄이는 제안은 정부재정규모를 통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FY2018 예산안에 따라 정책 추진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 이르러서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수지 장기전망



주: 그림에서 실선은 FY2018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점선은 오바마 前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재정수지 장기전망  
 자료: OMB(2017c), Chart 3-2. Comparison of Annual Surplus/Deficit 인용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재정수지 전망에는 경제성장률 및 세입증가율에 낙관적인 예상치가 바탕에 깔려 있음(〈표 1〉 참조)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GDP 성장률은 1.6%로 예상한 반면, 2018년에는 2.3%, 그 이후에는 매년 0.1~0.3%p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3.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2018년~2023년 동안 재정수입은 매년 4.92% 증가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3.3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는 동기간 매년 8.69%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표 1〉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성장률	2016 <sup>1)</sup>	전망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1.60	1.6	2.3	2.4	2.7	2.9	3.0	3.0
재정수입	0.52	5.91	5.61	4.38	4.40	4.50	5.50	5.13
재정지출	4.50	5.40	0.79	6.01	3.00	3.29	4.66	2.09
재정적자	34.02	2.73	-27.03	19.55	-7.22	-6.56	-3.07	-27.83

주: 1) 2016 회계연도의 재정수입, 재정지출 증가율은 오바마 행정부의 FY2017 예산안의 Table S-1. Budget Totals에서 2015년 관련 수치를 이용

자료: (i) 경제성장률: OMB(2017c), Table 2-1. Economic Assumptions

(ii) 재정수입 · 지출: OMB(2017a), Table S-1. Budget Totals

- 트럼프 행정부의 세입·세출 전망에 따르면, 2018~2023년 기간 동안 세입은 매년 1,925억달러씩 증가하고, 세출은 매년 1,452억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표 2〉 참조)
  - 세입항목을 고려하면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법인세 순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재량지출은 연간 140억달러 감소하고 법정지출은 1,10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국방분야 예산삭감 및 오바마케어 폐지로 연간 516억달러씩 세출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삭감 조치한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 지원, 교육기회균등, 지역사회 발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재량지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 국제개발처(State and USAID) 예산을 전체 삭감

-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급여수혜조건을 강화하거나 정책 규모를 줄여 지출 감소 시도
  - 예를 들어, 2018~2022년 동안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제도를 변경하여 6,543억 달러, 기존 학자금대출제도 폐지 후 소득기반 학자금지원제를 도입하여 2,53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제안

〈표 2〉 2018~2023년 평균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단위: 십억달러)

세입		세출	
항목	증감분 <sup>1)</sup>	항목	증감분 <sup>1)</sup>
개인소득세	128.0	재량지출	-14.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63.8	국방	11.8
법인세	16.8	비국방	-25.8
소비세	2.8	법정지출	110.7
관세	2.7	사회보장	69.0
유산세 및 증여세	1.7	메디케어	48.2
기타수입	-4.2	메디케이드	16.5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총당금	-19.2	기타법정지출	-0.5
총세입 <sup>2)</sup>	192.5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총당금	-25.8
		인프라 이니셔티브	3.3
		총세출 <sup>2)</sup>	145.2

주: 1) 2018~2023년 기간 동안 각 연도에서 전년도 예산 차액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

2) 2018~2023년 기간 동안의 총세출, 총세입의 평균치를 계산하였기에 항목당 증감분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MB(2017a), Table S-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Ⅲ 오바마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

- ● 트럼프 행정부 FY2018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i) 문제인식과 접근방법, ii) 재정건전성 확보수단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의 FY2017 예산안과 비교

#### 1. 문제인식과 접근방법

- ● 오바마 前행정부는 정치·경제·환경 전반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자국민 안전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즉각적인 정책조치를 시도(〈표 3〉 참조)

- ● FY2017 예산안에 따르면 오바마 前행정부는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감소,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경제적 불평등성 완화, 기후변화 대응, 질병퇴치 등을 연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sup>1)</sup>
- ● 이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前행정부는 혁신·기회평등·국가안보·리더십을 강조
  - 경제적 불평등 경험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보건, 지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회균등 정책을 도입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
  -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강조하여 더 나은 정책 제안·실행을 위한 연구지원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新에너지 산업에서의 미국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 구상
- ● 반면, FY2018 예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국가채무 부담 및 저성장을 “위험한 결합(dangerous combination)”이라고 간주하며, 외부위협에 대한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오바마 前행정부의 재정정책과 규제로 미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비판
  - 관대한 이민정책, 불공정 무역으로 안보수준 및 자국민 후생이 저하되었다고 주장
    -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규제 완화, 국방비 증대, 이민 집행국 역량 강화 시도
    - 정부의 복지비용 가중 등 이민자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와 큰 차이를 보임

〈표 3〉 오바마 前행정부 vs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비교: 문제인식과 접근 방법

분야	문제의 해결방향	
	오바마 前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기후변화	초점: 기후변화대응 위한 리더십 강조 방안: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모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기여 필요성 인식 없음

1) OMB(2016) 참고하여 작성함. 본 예산안에서 오바마 前대통령은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부터 FY2017 예산안 작성시기까지 성취한 여러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인식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력

분야	문제의 해결방향	
	오바마 前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질병퇴치	질병퇴치를 위한 자원, 기술 등 협력체계 구축	질병퇴치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조치 취하지 않음
경제불평등	초점: 전반적인 경제불평등 방안: 보육·교육기회 확대, 경제안전망 확대 위한 일가정 양립 가능성 제고, 빈곤 탈피 및 지역간 이동 지원	초점: 자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무역적자 방안: 자국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이민자 단속법 강화, 무역보호주의 강조
국가안보	초점: 테러집단 방안: 테러집단 공격성 약화 위한 조치, 사적 영역 및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강화	초점: 테러집단과 이민자 방안: 군사적 역량 및 국경안보 강화, 이민자 관련법 단속법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
정부역할	초점: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방안: 실험경제학 등의 연구결과 바탕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	초점: 정부의 규제, 연방정부 중심의 정책, 세 제정책, 정부서비스 범위 방안: 오바마케어 폐지, 정부의 규제수준 완화, 주정부의 자율성 강화, 소득세 감소, 대체최소세금 폐지, 복지서비스 자격요건 강화

자료: OMB(2016), OMB(2017a)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또한 오바마 前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질병퇴치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기존의 재정지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
  -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주둔 미국의 외교 및 군사인력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도록 해외원조 정책을 개편할 것을 제안
  - 미국의 실리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해외 정책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삭감을 계획
- 한편,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前행정부 및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요한 연방정부 정책 대상으로 간주
  - 오바마 前행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보호법(National Cybersecurity Protection Act),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등의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지를 피력
  - 트럼프 행정부도 국토부의 국가사이버보안정보통합센터(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안

## 2.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수단

- ● 연방정부의 국가채무 규모는 2009년도 11.8조달러에서 2017년 20.3조달러로 8년 동안 8.47조달러 증가하였고, GDP 대비 채무비중은 2009년 82.4%에서 2017년 106.2%로 23.8%p 증가
  - 오바마 前행정부 집권 기간, FY2010-FY2014년 동안 국가채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되 GDP 대비 채무비중은 감소하였음. FY2015에 채무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기존 추세로 회귀
- ● 재정건전성 확보문제는 오바마 前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는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 측면에서도 두 행정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오바마 前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경제불평등 완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상충되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중장기 성장전략 선택
  -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높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간주, 국방비는 증대하면서도 비국방비 재량지출은 줄여 재정건전성 유지하려는 계획
- ● FY2017 예산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조세·재정정책으로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다음의 세 가지 채널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취약계층 지원, 불평등도 완화, 교육기회 확대 → 경제성장 기여 → 조세수입 증대
  - 혁신, 연구개발 등으로 비교우위 선점 → 국부/일자리 창출 → 조세수입 증대
  -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증대, 고소득자들 대상 조세제도 정비 → 조세수입 증대
- ●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는 혁신,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법인세제 개정,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제고 등 기업가 중심 정책을 제안
- ● 또한 오바마 前행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법적 허점(loophole)을 차단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노력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법적 허점을 차단하여 세수를 줄이고자 했다는 점도 비교 대상<sup>2)</sup>

2) "The Budget proposes a series of reforms to SNAP that close eligibility loopholes, target benefits to the neediest households,

-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뿐만이 아니라, 일시적 경제소득을 보전하는 TANF 제도, 장애인 급여 제도 등 다수의 복지서비스/급여제도 등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재정지원을 줄이고자 계획

〈표 4〉 오바마 前행정부 vs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비교: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

	오바마 前행정부 (FY2017 예산안)	트럼프 행정부 (FY2018 예산안)
세수 증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 → 세수증대</li> <li>· 취약계층 지원 통한 기회균등, 이민자 수용 → 성장잠재력 확대 → 세수증대</li> <li>· 고소득자 법적 허점 차단</li> <li>· 오바마케어 통한 고소득자 세율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제 개편 → 투자 활성화 → 일자리창출 → 세수증대</li> </ul>
세출 축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제안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 확대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바마케어 폐지 통한 재정지출 절감</li> <li>· 취약계층 법적 허점 차단, 학자금지원 제도 개편, 복지수혜 자격요건 강화 → 정부서비스 재정지출 절감</li> <li>· 연방정부 규모 축소</li> </ul>

자료: OMB(2016), OMB(2017a)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V 검토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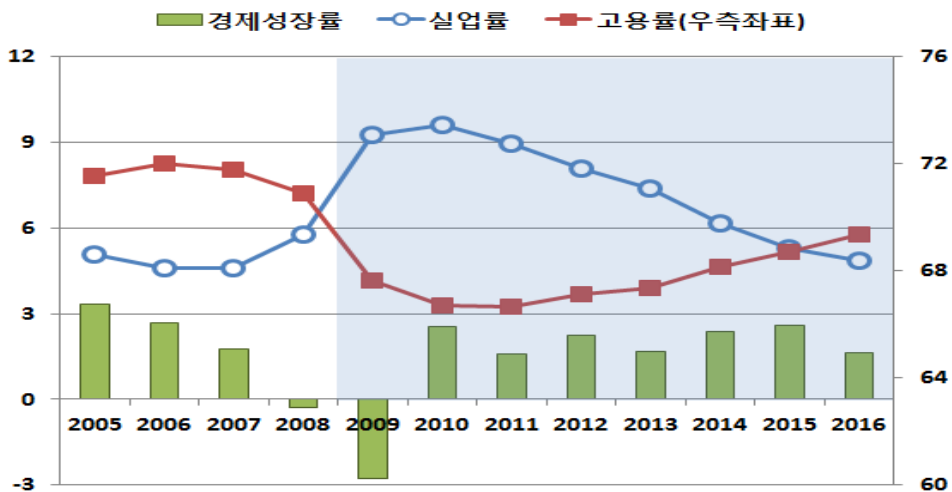
- ●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은 국방비 증액, 무역·이민 정책을 수정하여 자국민을 물리적·경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제시
  -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화와 연방정부의 규제가 미국 경제침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
  - 일자리 부족 문제는 단순한 무역정책 때문이 아닌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은 이에 대한 고민은 보여주지 않음
    - 주간지 *The Economist*는 미국 정부가 정작 걱정을 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기술(온라인 쇼핑 등)로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지적<sup>3)</sup>

and require able-bodied adults to work,” OMB(2017a), p.10

3) 주간지 *The Economist*는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쇼핑을 하지 않아 유통업 폐업률이 증가하는 있는 추세. 2.5조 달러에

-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前행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및 정부 규제가 미국 경기 침체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통계치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7년 전후 수치를 인용
  - 오바마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 줄곧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졌기에 ‘정부 시장개입 및 규제 → 경제침체’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sup>4)</sup>(그림 3 참조)
- FY2018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한 자국민”(undeserved and disadvantaged citizens)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명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효율화’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
  - EITC, 가족급여, Food Stamp 등 소득안전망(income security) 관련 자격요건 강화하여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낮출 것을 제안
  - 소득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최소세제(Alternative Minimum Tax)<sup>5)</sup> 폐지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새로운 예산안의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sup>6)</sup>

[그림 3] 미국의 경제지표 (2005-2016년)



주: 음영처리된 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집권 시기를 나타냄  
 자료: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2017년 8월 16일 접속)

육박하는 미국 유통업 산업이 흔들릴 경우 미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함(2017년 5월 13일자)  
 4) 오바마 前행정부 집권 기간에 보인 경기 회복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금융 위기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경기회복일 수 있음. 그러나 오바마 前행정부 때 경제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로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  
 5) 고소득 납세자가 여러 공제 혜택을 통해 연방정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6) *New York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예산안으로 한해에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측함(“Trump Could Sav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One Year Under His Proposed Tax Plan,” 2017. 4. 28.)

-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낮추어 기업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나, 비용 감소로 인해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지는 불투명
  - 자본과 노동이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인 경우, 에너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의 배타적 이민정책으로 기업 투자유인 하락 가능
    - ※ 고숙련 해외 인재 공급 감소 → 노동시장 미스매치 → 자본 수익률 감소 → 투자유인 감소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높은 경우(substitutable), 기업 투자의 효과가 고용증대가 아닌 기술 개발 및 자동화로 나타날 수 있음
  
- 요컨대, 트럼프 정부는 기업중심 정책을 펼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비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면 국방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제시된 정책으로는 더 큰 재정적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기업, 고소득자 위주의 세제개편 → 경제성장에 기여할 지 불투명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해도 애초의 세수감소분 상쇄할 수 있을지 미지수
  - 오바마케어 폐지, 취약계층 정부지원 감소 → 향후 정부의 복지지출 수요 → 재정부담 가중
  - 국방비 증대로 정부지출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세수 성장률이 낮으면 적자폭 심화
  
- 이상의 미국 행정부 예산안 검토를 통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정부가 검토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에 세수 증대와 세출 감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할 것인가?
  
- 기본 정책방향만 보면 특정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장기적인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다지려고 노력한 오바마 前행정부의 접근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유지 및 기업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감행하면서도, 법적 허점(loophole)을 차단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정보기술 인프라를 개선·확충하여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

## | 참고문헌 |

---

- “Sorry, we’re closed – The decline of established American retailing threatens jobs,” The Economist, 2017. 5. 13.
- “Trump Could Sav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One Year Under His Proposed Tax Plan,” The New York Times, 2017. 4. 28.
-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접속일자: 2017. 8. 16.)
- 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17,” 2016, <https://www.govinfo.gov/features/featured-content/Budget-FY2017> (접속일자: 2017. 7. 30.)
- 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 – President’s Budget FY2018,” 2017a, <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 (접속일자: 2017. 7. 30.)
- 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American First –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7b, <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 (접속일자: 2017. 7. 30.)
- 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Analytical Perspective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 2017c, <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 (접속일자: 2017. 7. 30.)
- 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 Historical Tables,” 2017d, <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 (접속일자: 2017. 7. 30.)



**BRIEF**

---

###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2017. 8. 31(통권 제55호)

---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